



권영길에게 투표하라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전진을 위해



절대로 찍어선
안 될 자들의 실체
이명박/이회창/정동영/문국헌
6~7면



17대 대선과 민주노동당
- 권영길을 지지하라
- 권영길의 '금기를 깨는' 공약들
- 권영길 지지의 목소리
3, 8, 12면

BBK 은폐와
떡값검찰의 뿌리
4면

'삼성 정권' 연장아합을
분쇄하라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국제신용위기의 배경
5면

대학 총학생회 선거 평가
11면



존 몰리뉴 칼럼 -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9면

www.counterfire.or.kr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차베스의 개헌 실패 평가 논쟁
개헌 실패를 우익들의 악선동 때문이라
고 보면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진정
한 교훈을 찾기 힘들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더 세계 하라”

–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2002년 CIA로부터
물고문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 발표로 BBK 의혹이
해소됐다. 모든 세력은 이 발표에
승복해야 한다. 진실보다 더
소중하고 강력한 가치는 없다.”
– <중앙일보>

“검찰의 대(對) 이명박 과잉서비스가
이명박 후보한테도 검찰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조갑제

“이번 결단은 최고의 공인으로
나가기 위한 다짐행사로 봐 주면
합당할 것”
– 이명박의 재산헌납 쇼에
대한 <중앙일보>의 찬양

“이방에서 저방으로 간다고 해
보자. 문 두 개 열고 가면 쉬웁텐데,
제일 빠른 거리로 벽을 부수면서
가는 스타일이다. 대가리를
박아가면서 가는 스타일이다.”
– 이명박에 대한 김경준의 논평

“계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경호가
걱정된다. 두 사람에게 던진 것이
계란이 아니고 수류탄이었다면
무슨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 조갑제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였지만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다’며 아버지 같은
참여정부를 팔아먹은 후레자식”
– 한나라당 김학송

“삼성의 경영 차질은 곧바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는 ‘실인검’이
될 수 있어 불안한 게 사실”
– 삼성 특검을 비난하는
<파이낸셜뉴스>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
성중공업의 대형해상크레인시설
과 원유수송선 허베이 스프리트
호가 충돌해 1만 톤이 넘는 원유
가 바다로 새 나왔다. 순식간에
생태계를 파괴할 ‘기름 지옥’ 속
에서 통곡하는 어민들을 보면 가
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의 안일
한 대응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
기가 피해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
다. 삼성은 사회뿐 아니라 바다
까지 더럽혔다. 왜 유조선은 표
박지를 벗어나 있었는지, 왜 예
인선들은 ‘충돌 위험’ 경고를 무
시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가 난 지 6
시간 뒤에도 “추가 기름 유출은
없다”며 이런 상태를 이틀 더 방
치했다. “48시간 뒤에나 해안에
상륙한다”는 식의 예측은 어떻
게든 방제 비용을 아껴보려는 정
부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주민들이 ‘기름 쓰나미’를 지
켜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사고

이윤 논리가 낳은 끔찍한 재앙

않는다고 중단해버렸다. 3천~5
천 톤급 방제선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은 무시되고 3백~5
백 톤급 선박으로 대체했다.

사고 유조선도 선체가 한 겹으
로 된 단일선체였다. 미국과 유
럽 지역에서는 두 겹 구조의 이중
선체만 운행할 수 있지만 한국 인
근을 지나는 유조선의 40퍼센트
가 아직도 단일선체다. 정유회사
들의 이윤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
려로 단일선체 사용 금지 제도가
2010년까지 유보됐기 때문이다.
지금 오염된 해안의 길이만 1
백70킬로미터나 되고 오염 지역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
는다. 양식장과 해변은 검고 끈적
거리는 기름과 악취로 가득하다.
생태계가 원상 복구되는 데 길게
는 1백 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정유회사들과 삼성,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끝까지 모든 책
임을 져야 한다.

박건희

시커먼 기름을 보는 어민들의 속은 솟덩이처럼 타 들어간다

발생 뒤 24시간이 다 되도록 방
제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뒤늦
게 지급된 방제물자와 방제작업
도 유명 해수욕장들에 집중됐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
다. 1995년 씨프린스 사고 후,
연구 용역 결과 기름 유출을 대

비해 2천5백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정부는
‘없던 일’로 해버렸다. 이어서 정
유회사들이 출자한 방제전문회
사를 세웠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을 맡긴 셈이다. 방제물자 생산
도 잠깐 하다가 더 사고가 나지

고(故) 김선일 씨 유가족 패소

살인 정부에 면죄부를 준 법원

노무현 정부가 고(故) 김선일
씨를 두 번 죽였다. 김선일 씨 유
가족들은 노무현 정부가 “재외국
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질질 끌어 오다 지난 12월
3일 결국 유가족 측의 패소 판결
을 내렸다. 김선일 씨의 죽음에 노
무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사관이
교민들의 현황을 매일 점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면서도 고작
“각종 지침을 전달”한 것이 최선
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정부에 면죄
부를 줬다.

게다가 법원은 피살 사태의 핵심
원인인 파병에 대해 “정부가 추가
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질 납치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
방법”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 입장을 정당화했다.

후안무치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며 한
국군 철수를 요구한 김선일 씨의
절규를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냉혹
하게 무시하지 않았다면 김선일 씨
는 죽음을 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법원이 노무현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후안무

치의 극치다. 법원과 노무현 정부
는 한 줍은이의 죽음과 그 가족들
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전쟁 지
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판
결이다. 법원은 김선일 씨의 죽음
에 정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
림으로써 다가오는 파병 재연장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반전 운동은 파병을 정당화하는
후안무치한 자들에 맞서 계속 투쟁
해 점령과 파병이라는 비극의 뿌리
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자이툰 부

대가 기름발 위에 있다”며 파병을
찬성하는 이명박, 파병 참여 정부
의 계승자 정동영, “한미 동맹은
계속돼야 한다”는 문국현, [피랍사
태가 벌어지면] “특수부대라도 보
내야 한다”는 이회창에 맞서 점령
과 파병에 반대하는 권영길 후보에
게 투표할 필요가 있다.

김광일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
속된 조민호 동지의 두 번째 공판
이 12월 11일 열렸다. 성동구치소
측이 비열하게도 전날 늦은 저녁
에야 다음날 공판을 통보하는 바
람에 당일에는 재판 소식이 알려
졌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원,
이랜드 조합원, 인권단체 활동가,
다함께 회원 들 20여 명이 조민호
동지에게 연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했다.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도 대지
못한 채 조민호 동지가 경찰 두 명
을 폭행했다고 기소했다. 조민호
동지의 공판은 기소 내용의 진위
를 가리기 위해 12월 27일 다시
열린다.

방청이 끝난 뒤 약식 집회에서
홈버 중계점의 한 조합원은 “앞
으로도 조민호 동지의 빠른 석방
을 위해 함께하자”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류민희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김문성(한국노총 조합원)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이
후 꼭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
의 등에 칼을 꽂았다. 정책연대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 방해되
는 강경노조 퇴치하겠다’, ‘자
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
로를 노동자라 부른다’ 하고 떠
드는 이명박이 87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지지 후보라는 것이
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노조위원

장 납치 등 노조 말살에 앞장선
자,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부
사장을 사위로 둔 자, 서울시장
시절 공무원노조와 지하철노조
를 탄압한 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노동자의 지지
를 받을 만한 후보라는 것인가.

난리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처음
부터 사기극에 불과했다. 지도
부 내 다수인 한나라당파는 이
명박 지지를 위한 술책으로 조
합원 총투표 방식을 지지했다.
범여권 지지자들도 일부 있었지

만 이들은 ‘당선 가능한 자본가
정당과 연대를 통한 출세를 바
란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
치했다. 이들은 진보적 노동자
당인 민주노동당 배제에 서로
동의했다.

결국, ‘정책연대’는 범죄자 이
명박 지지를 위한 더러운 사기
극임이 드러났다. 이명박은 정
책연대의 요건인 TV토론도 거
부했고, 정책 질의에 부실하거
나 반동적인 답변을 보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명박 지지 투표로
몰아간 탓에 정동영·이회창마
저 정책연대를 거부했고 정책연

대 투표 응답률이 푹 떨어졌다.
그러자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내거는 난리 끝
에 겨우 이명박 지지라는 결과
를 억지로 뽑아낸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용득 지도부의 이런 배신과
야합의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반노동자적 친재벌 우파 후보
를 위해 ‘표떼기’를 저지른 한국
노총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노
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관
되게 싸워 온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다.



진보를 염원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총기 탈취 사건이 일어나자 몇몇 대선 후보들은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린 데가 많은 이명박은 아예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BBK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총알로 날아드는 게 아닌지 두려워할 만도 하다.

그럼에도 '문지마' 지지 속에 이명박이 대세를 다지고 있는 현상은 사이비 개혁 정부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반감의 깊이를 헤아릴 때만 이해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대중은 난생 처음인 일들을 여럿 경험했다. 평생직장으로만 알았던 곳에서 집단으로 정리해고 됐고, 침략전쟁 참전국이 자 점령국의 국민이 됐다.

경제성장률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동안에 대중의 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7퍼센트에서 0.5퍼센트(2005년)로 곤두박질쳤다. 10명당 6명이 비정규직인 비율(55.8퍼센트)은 OECD 국가 평균(15퍼센트)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1990년대 말까지 자식들의 삶이 자기보다 나으리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88만 원 세대'로 전락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는 자식 세대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노무현과 개혁 사기꾼들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설사 당선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지가 사이비 개혁 세력이 추진한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은 이명박에게 큰 부담이다. 바로 그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이명박이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지지를 얻은 바로 그 이유(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에 따른 심판론)로 그가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도 자신에 대한 지지가 대중의 일관된 보수화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회창에게 "무늬만 보수"라는 경멸을 받으면서도 짐짓 막무가내 보수는 아닌 것처럼 가장해 왔다. 이명박 진영에 있는 조갑제 못지않은 우익들이 "무늬만 보수"를 용인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를 위해 '산토끼'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이명박 대세'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 찬 것인지 보여 준다.

반전 ·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왜 반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권영길 후보에게로 즉각 모이지 않는지 민주노동당원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신생 정당이 4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 온 양대 정당을 제치고 전국적 대안으로 선택되기는 쉽지 않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선 정치 투쟁을 더 단호히 벌였다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선언이고,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 건설을 위한 투자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조금 더 강화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비교하면 상승 가도에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실망감을 나타내기보다 '이명박 대세'의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낼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한다. 그 첫째는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사표가 아니다. 삼성SDI 하이비트 노동자의 촛불인 같은 지적대로 "권영길 후보가 얼마나 표를 받느냐에 따라 자본가들은 우리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늡할 것이다."

권영길 후보가 받는 표는 반전 · 반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표이고,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확고하게 만들 진보의 기반이다. 권영길 후보가 말하듯이, "민

주노동당은 재벌로부터 돈 받지 않았다." 재벌과 기업주와 부자 들에게 돈 받는 당은 그것이 설사 불법 비자금도 아니더라도 재벌과 기업주와 부자 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

계급 분단선

반면 보수층도 지켜보는 TV 토론회에서 권영길 후보는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좌파 정당"임을 자임했다. 또, "노동자 ·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재벌, 땅 부자, 주식 부자 들에게 세금 걷겠다"고 다짐했다. 한 패널이 "부자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내각 인사 원칙은 반신자유주의"라고 했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주장했다.

설사 단일화해도 범여권은 희망이 될 수 없다

정동영-문국현-이인제 단일화는 설사 된다 해도 진보진영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첫째, 설사 단일화돼도 이른바 "대역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문국현은 범여권과 아슬아슬하게 선을 그어온 덕분에 얻은 '인기'의 비결을 포기하는 셈이고(그는 "정동영의 정치적 이상"을 일부 인정했고, "낡은 정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던 민주당과의 통합에도 문을 열었다), 백악이 무효인 신당은 역시 '잡탕'에 일가견 있다는 것

을 재확인시킬 뿐이다. 범여 연대 대상으로 이수성 후보가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이수성은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상임고문을 지냈다. 게다가 그는 삼성언론재단의 이사장도 지냈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기구는 "시장경제체제 기본 원리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단일화는 무엇보다 한나라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대변할 수 없다. 2004년 총선에서 역사의 쓰레기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모으는 것은 새 정권 하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투쟁에는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득표를 한다면 이런 구실을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번 대선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던지는 이런 의미에 비춰볼 때,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 '전진'의 일부 간부들이 분당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오는 것은 안타깝다. 당내 세력관계상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당원들을 제대로 이끌 생각보다 당권 장악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듯해 다소 씁쓸하다.

더욱 걱정인 것은 '어차피 분당할 것'이라면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선 성적이 나빠야 분당 명분도 선다고 부지불식간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분당이 이유 있다 해도, 심지어 이미 분당에 착수했다 해도 이런 태도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태도다.

민주노동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진보를 자임하고 노동계급 속에 기반을 둔 개인과 단체 들은 모두 권영길 후보 지지 표를 모으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지지를 하면서 비판해야지, 자본가 정당들과 노동자 정당 사이의 분단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권영길 개인에게 던지는 표도, 단지 민주노동당이라는 특정 정당에게 던지는 표도 아니다. 그것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자, 기업주에 대한 투쟁을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벌여겠다는 선언이고, 반전 · 반신자유주의 운동 건설을 위한 투자이다.

에 버려졌던 한나라당에게 오늘 같은 영화를 안겨 준 것은 바로 통합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정부였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범여권은 한나라당과 말로는 싸울지 몰라도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실천에서는 함께할 것이다. 이명박과 정동영-문국현은 이미 한미 FTA 찬성 의견이 일치하고, 부유층에 세금 감면을 해 주려는 것도 똑같고, 미국의 중동 지배를 지원해 행한 파병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같다.

따라서 정-문 단일화 지지는 한나라당 독주를 막고 싶은 선의와는 달리, 한나라당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믿음직한 협력 파트너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노무현이 창조한 **떡값검찰**이 이명박을 살려주다

BBK 수사 과정과 발표는 ‘권력의 심부름센터’로서 검찰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검찰은 작정을 하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임을 선언했다. 체면치레용 적당한 물타기도 없이 모조리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지배자들은 BBK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했다.

처음부터 검찰은 ‘이명박 무죄’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짜맞추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고 거래를 제안했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명박은 “법은 살아 있다”며 만족했다.

얼치기 사기꾼 김경준은 전과14범의 이명박과 닮고 닮은 검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김경준은 지금 “무섭다. 차라리가만히 있고 싶다”고 한다.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 최재경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최구식의 사촌이다. 노무현 측근과 이명박 측근의 비밀회동과 빅딜 설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은 이명박의 범죄를 무마해 주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고, 둘이 같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견회를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쪽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동영은 이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빅딜

역겨운 떡값검찰은 바로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 줬다’던 노무현이 만든 작품이다. 이견회 처남 홍석조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겨 진행한 ‘검찰 개혁’의 결과다. 떡값검찰을 이용해 대선자금 비리와 측근 비리 등을 덮고 이견회를 보호해 온 것도 참여정부이고 정동영은 그 계승자다. 따라서 정동영이 부패 척결을 외치며 촛불 시위하는 것은 봐주기 괴롭다. 정말 “아무 때나 촛불들지 말아야”(권영길 캠프 박용진 대변인) 한다.

‘권력의 나침반’이라는 김종필은 검찰 발표 후 눈치빠르게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밑에서 삼성의 메신저 구실을 하던 진대제도 이명박에게 붙었다. 이명박

은 벌써 “[이견회가 특검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삼성 맞춤형 대통령 노릇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떡값검찰은 이명박 시한폭탄을

‘삼성 정권’과 떡값검찰의 관리자는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교체되고 정동영은 군침만 삼킬 것인가?

해체하지는 못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도 BBK 등 온갖 비리의 뇌관들은 언제든지 다시 타들어 갈 수 있다.

부패는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고, 부패 고리의 일부인 범여권은 이것

을 일관되게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유착 구조에서 자유로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은 이명박과 떡값검찰, 부정부패에 맞선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검찰 – 지배자들의 더럽고 썩은 칼

BBK 수사 결과가 보여 주듯 검찰은 지배자들의 썩은 칼이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미군정에 빌붙어 다시 또 민족과 민중을 유린하고,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에 아부하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것이 검찰 백년의 역사”(경상대 법대 이창호 교수,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다.

검찰은 권력자의 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그 자신이 부패 고리의 일부로 작동해 왔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도 검찰총장 김태정은 옷 로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당사자였다. 전 검찰총장 신승남도 현대의 비자금을 받은 게 드러났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재벌 총수와 노무현, 이회창에게 면죄부를 주며

대선자금 의혹을 덮어 버렸다.

무엇보다 검찰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삼성 X파일 사건 때다. 떡값검찰은 “삼성그룹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가 보더라”며 이견회를 감싸기 바빴고, 검찰총장 김종빈은 “[이견회] 출국금지 인권침해”라고 했다. 결국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반면 검찰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이창호 교수)하며 탄압해 왔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데 앞장섰고, 한미FTA 반대 운동·반전 운동·비정규직 투쟁을 탄압

했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일심회’ 마녀사냥을 지휘한 것도 검찰이다. 이런 떡값검사들은 퇴임 후에 삼성 법무탐이나 김앤장으로 자리만 옮겨 더러운 짓을 계속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 억압기구인 검찰의 본질에서 비롯한다. 검찰은 지배자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 주며 피억압 민중을 억압하는 구실을 한다.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도 2005년 검찰청 특강에서 “사회 지배 구조를 지키는 것이 검찰”이며 “경영권이 검찰의 보호 대상”이라고 했다.

피억압 민중에 의해 선출·통제되지 않는 검찰은 인맥·흔맥·떡값 등으로 연결돼 있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질서는 철저한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의 원칙 속에 유지된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떡값검찰에 맞선 투쟁을 통해서만 바로 세울 수 있다.

이주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연대하라

지난 11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교회에까지 난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연행하려 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바로 다음날부터 국무총리 사과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열흘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

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종교계로 항의가 확대될 것이 두려워 무리수를 시인한 것이다. 또 이농성이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연행에 항의하는 투쟁과 결합되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까지만·라주·마숨 등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을 싹쓸이 연행한 것도 모자라, 의정부·김포·수원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연행하고 있다.

그래서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12월 5일부터 KNCC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국제엠네스티 등 곳곳에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외노협이 후원금을 내고 비대위 활동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필리핀과 홍콩의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다.

12월 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07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집회’에는 5백여 명이 참가해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과 이주노조 탄압에 항의했다. 또 이랜드·코스콤·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참가해 끈끈한 연대의 정을 보여 줬다.

이런 항의와 규탄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기어코 강제출국시키려 한다. 세 동지들을 빠른 시기에 강제출국시키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출국시킨다고 해도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노무현 정부 이주 정책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낼 것이며 강력한 분노와 새로운 투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조명훈

이주지도부 석방 촉구 문화제와 연대 후원의 밤

일시 : 12월 22일(토) 7시 장소 : 미정
주최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국제 신용 위기가 폭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듯하다. 12월 10일 스위스계 거대 투자는 행[UBS]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서] 1백억 달러 [약 9조 2천4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필요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미국의 경기 후퇴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상당히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위기가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 — 가난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 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지금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현 재무장관인 행크 폴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폴슨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폴슨은 대형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줄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그 손실 규모는 약 1백50억~3백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정도 규모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담보대출금 등등도 갚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실채권 규모가 7백억~8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1989년 이후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10년 동안 마비시킨 부실채권 규모와 맞먹는다.

그러나 국제 은행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이미 마비됐다. 8월 이후 은행들은 상호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제 금융의 주요 매커니즘이 마비된 것이다. 이것은 누가 손실을 입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손실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인정한 손실 규모는 약 7백억 달러다. 그러나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실제보다 더 좋게 꾸미기 위해 고안된 구조화투자회사(SIVs) 같은 파생 금융 기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기 때문에 부실채권은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널리 퍼졌다.

주택담보대출

한 정책입안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행] 시스템에서 서류탄이 잇달아 터지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은행 시스템] 마비를 악화시킨 것은 ‘실물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의 위기는 새천년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들은 닷컴 거품 붕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는 등 지출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이 역전되고 있다. 신용대출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대출 금리가 인상되자 가계들은 지출을 줄이고 따라서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이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다.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양대 경제인 미국과 영국에서 고용과 생산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서양 양쪽에서 소비 지출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조짐이 이미 나타났다.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6~7년 전에 사용한 방법들을 되풀이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는 물가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미국·영국·유럽연합 정부들이 설정한 목표치를 웃돌았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세계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수요 증대로 식품, 석유, 기타 천연자원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경기부양책을 너무

많이 쓰면 물가오름세를 부추겨 지난 15년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 그리고 우리도 — 세계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영국은행은 지난주에 금리를 겨우 0.25퍼센트 내린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소심한 태도로는 심화하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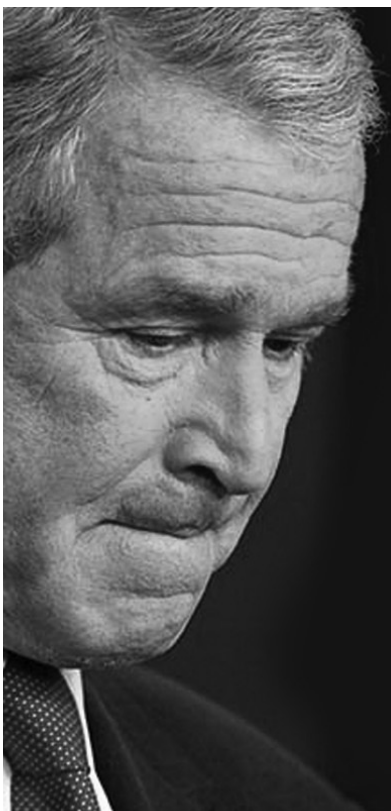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2008년 1월 19(토)~20(일)

■ 2008년 세계 정세

■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



이란 핵에 관한 부시의 거짓말이 들통나다

지난 2년 동안 부시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시는 핵무장한 이란이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란 핵에 관한 최신 국가 정보평가보고서(NIE) 때문에 망신살이 뵈치게 됐다.

NIE는 미국 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연합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3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으며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것은 이란 공격의 명분을 쌓고 있던 부시 정부, 네오콘,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이다.

NIE의 정치적 파장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이 보고서의 발표가 부시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다소 음모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예컨대, <아시아 타임스>는 NIE 발표가 이란 공격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NIE에는 이란 정부가 2003년 이전에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부시가 이런 서툰 방식으로 이란 침략을 정당화하려 했다면, 그는 자기 지지율(30퍼센트대)보다 지능지수가 더 낮을 이 틀림없다.

다른 한편, NIE 발표를 부시 정부의 우회적인 이란 침략 포기 선언으로 보는 주간 <타임>의 해석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부시 정부와 톨마니들은 NIE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시는 NIE 발표 직후 이란이 여전히 위험

하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네오콘은 이 보고서 발표가 굴욕적 양보 정책을 의미한다고 성토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중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허풍을 쳤다.

이런 주장들보다는 이라크 점령이 정당성을 잃고, 부시가 레임덕에 빠지면서 NIE 발표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그러나 NIE를 둘러싼 소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시와 그 주변의 전쟁광들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란 확전 유혹을 떨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 반전 운동은 이 점에 주목해 이란 침략 반대 여론과 행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김용욱

이명박

부패와 신자유주의의 화신

“이명박 경호실장”을 자처한 검찰은 이명박에게 억지 면죄부를 줬지만, 그의 과거는 세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하다.

의혹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BBK 사기극을 비롯해, 삼암DMC 특허 분양, 천호동 개발 비리, AIG 특혜를 아우르는 ‘4대 의혹’ 관련 자금만 해도 무려 2조 8백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개한 재산은 3백50억 원이지만, 이명박이 숨겨 둔 재산은 8천억 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의 재산현납 ‘쇼’는 심상정 의원의 말처럼 “돈다발로 하늘을 가리려는 발상”이다. “도대체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얼마나 더 해 처먹으려고 저러는가” 하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이 쌓은 이 어마어마한 부는 독재 정권에 충성하며 현대건설 노동자들의 고혈을 뽑아 만든 것이기도 하다. 피땀 흘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발전소를 세운 노동자들이야말로 경제성장 ‘신화’의 진정한 주역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그리는 집권 5년의 청사진은 반노동자·친기업 정책의 집결판이다. 그는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비교해 비정규직의 수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며 노동 유연성 강

화를 주장한다. 반면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는 7조 원이나 감면하려 한다.

이명박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들을 모두 시장에 팔아 치우려 한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병원 영리법인화, 의료시장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키울 땐 위장전입, 커서는 위장채용’하는 귀족교육을 선보인 그는 대입자율화를 적극 지지하고 기여입학제도 반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평준화를 해체하려 한다. 이것은 아이들을 더 끔찍한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가난한 아이들을 소외시킬 것이다.

몇 톨

이미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영세상인들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무자비한 정계천 ‘복원’이나 공무원·지하철노조 탄압,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 지원을 외면한 행정에서 그의 개발독재 불도저식 본모습이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 몇 톨 쥐어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며 그 몇 톨마저 빼앗기를 일삼았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총망라한 한미 FTA도 적극 환영하는 이명박의 ‘경제 살

리기’는 “디지털 사회에서 빈부격차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냉혹한 소신대로, 끔찍한 양극화만 부추길 것이다.

일부 우익들은 쓸데없이 이명박의 우익적 확고함을 의심하지만, 이명박은 반동적 본심을 기회주의적으로 가려 왔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공간기구를 강화하겠다’는 그는 명백한 보수우익이다. “미국에 외교력의 절반을 쏟겠다”며 한미동맹을 예찬하고, 이라크 “기름발”에 자이툰 부대를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철저한 친시장·친제국주의적 우익의 옹립을 위해 이 나라 권력 실세들이 지금 너나할 것 없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삼성에게 이명박은 “유일한 동아줄”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이명박에게 ‘돈과 사람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명박 캠프 내에는 삼성 비자금과 연관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이명박은 이견회 일가의 그룹 지배를 제약하는 금산분리를 폐지하자고 줄기차게 외쳐 왔다.

손석춘 씨의 지적처럼 “이명박의 당선은 김용철의 폭로로 옷을 벗거나 감옥에 가야 할 위기에 몰린 저 술한 부라큘들에게 간절한 염원이다.” 이 추악한 염원은 좌절돼야 마땅하다.

정동영

꼴도 보기 싫은 개혁사기꾼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다 안고 가겠다”는 ‘참여정부의 황태자’ 정동영에게 이번 대선은 최악의 악몽으로 끝날 듯하다.

노무현과 정동영이 저지른 5년 동안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잃어버린 지지 기반을 되찾으려고 연신 켜면 어설픈 ‘원족 깡빕이’는 차가운 냉소를 받았을 뿐이다.

정동영은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친신자유주의, 친제국주의자이다.

그는 “총수를 처벌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되선 안 된다”며 부패 사술의 대부 이견회를 비호한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부패의 한 축이다. 한화합은 “2000년 총선 당시 정동영에게 수억 원대 특별지원금을 보냈다”고 폭로했고, 권노갑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공개하면, 정동영은 도덕적으로 죽는다”고 말했다.

2005년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가 모두 연루된 초대형 ‘오일게이트’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은 주범인 허문석을

만나 북한 골재 반입 운송 허가를 내 준 당사자였다.

정동영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도리어 “현장 노사갈등을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는 노조 지도부”를 성토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했다.

이랜드 노동자들을 찾아가서도 “고용 안정 대신 근로조건을 일정부분 양보”하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정규직화 쟁취’같은 경직된 목표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노동자들의 소망을 짓밟았다.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장본인다운 일이다.

황태자

정동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신봉자다. 그는 정부가 기업 활동에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기업 민영화와 FTA에 찬성한다. 따라서 그는 ‘정글 자본주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분양위가 공개에 반대했던 그는 더 나아가 양도세와 상속세를 줄여 땅부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자고 한다. 그가 누구에게 “좋은 대통령”이 되려는지는 분명하다.

정동영은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의 공고한 지속”을 전제로 하는 ‘평화’ 정책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노무현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동영은 열우당 의장을 지낸 2004년 당시 자이툰 파병을 강행한 자다. 심지어 2004년 총선 직전에 “우리당이 1백20석이었다면 [이라크 파병안과 FTA는] 작년[2003년] 연말에 처리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동영은 이따금씩 개혁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시기에는 언제나 ‘실용주의’적으로 우파와 타협했다. 노무현이 5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좌파 신자유주의’적 사기극에 도가 튼 자다.

정동영이 황태자인 이유는 노무현과 범여권의 ‘배신의 10년’에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이후에는 이 꼴보기 싫은 사기꾼이 더 안 나타나면 좋겠다.

절대 찍어선 안 되는 범죄자 · 사기꾼들

문국현

빈수레만 요란한 친기업주의자

잠시나마 문국현은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사기극에 질린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러나 그의 ‘놈헌스러운’ 본질이 드러나며, 지지율은 답보보다 최근에는 폭락했다.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공약은 빈수레만 요란하다. 내용은 부실하고 공약은 서로 충돌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서도 한미 FTA에 찬성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미국 업자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조한국당과 그의 자본가적 계급 기반이 모순을 증폭시킨다.

문국현이 재벌의 일부 문제점들(부패, 불공정 거래 등)을 비판하다고 해서 그가 자기 계급을 ‘배신’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업이 진보”라고 생각하며, “기업인이 국민적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는 그린피스가 지목한 미국의 대표적 반환경 기업 김벌리 클라크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칭송하며, 사장들을 위해 법인세도 감면하겠다고 한다.

문국현의 “사람중심의 시장주의”를 보면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정책에서 “좌파”는 없고 “신자유주의”만 있었듯이 문국현의 정책도 결국

‘위장 마술’ 못지 않다. 이런 자가 “법과 원칙” 운운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쓴웃음만 나온다.

‘똥잡바’를 입고 다니며 역겹게 서민인척하는 이회창의 정책은 철저히 이 사회의 ‘귀족’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

이회창은 “기업들이 마음껏 뿔 수 있도록”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3불 정책을 해체해 교육 양극화의 길을 닦겠다고 한다.

대북정책에서는 “NIL, 사수”, “햇볕정책 폐기”, “상호주의 견지”를 내세우며 한 나라당조차 “무늬만 보수”라고 비난할 정도로 호전적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우익적 확고함을 못 믿겠다며 대선 이후에도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익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사실, ‘검증된’ 부패·비리 정치인이자 ‘수구फल’인 이회창의 출마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선은 ‘수구फल’ 이회창이 영원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회창

‘수구फल’은 다시 무덤으로

이회창은 능히 원조 ‘수구फल’이라 할 만한 자다. 한국 사회 ‘수구फल’의 주류가 친일로 시작해 독재 정권에 부역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온 엘리트인데, 이회창은 그 대명사다.

이회창은 친일파의 후손으로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덕에 승승장구해 왔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민족일보〉사장 조용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악명 높은 정치 판사 출신이다. 두 번의 대선 패배로 무덤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이 ‘수구फल’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부패·비리로 인한 이명박의 ‘유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비리 자판기’ 이명박의 대안이 ‘차떼기’ 이회창이라는 것은 황당한 코미디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미 이회창의 본색을 알아본 대중이 그의 귀환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이회창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3퍼센트”, 〈한겨레〉 10

월 29일치)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트럭째 주교받은, 이른바 ‘차떼기’를 진두지휘한 이회창은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더구나 얼마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방호가 폭로한 것처럼, 이회창이 2002년 대선자금 잔금을 챙겨갔다는 의혹도 있다.

공공의 적

1997년 대선도 마찬가지로였다. 국제청·안기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 대선자금 수천억 원을 모금한 ‘세풍’ 비리, ‘안풍’ 비리는 물론이고, 북한 당국 관계자와 내통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총풍’까지 이회창의 대담한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두 아들뿐 아니라 당시 병역대상자였던 친인척 15명 중 7명을 병역 면제자로 탈바꿈시킨 이회창의 ‘탈법 마술’도 이명박의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은 문국현 같은 새로운 종류의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2005년 전 세계적인 안락사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킨 미국 여성 테리 시아보 - 그녀는 식물인간이 된 지 15년 만에 눈을 감았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

인간답게 죽을 권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12월 4일 한국사회 '근대 1백 년 금기 깨기' 일환으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존엄사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이 공약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암 같은 치명적 질병 때문이건 사고 때문이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온갖 기계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 그러나 누가 보기에 도 명백히 죽어가고 있는 —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경험이다.

존엄사

또 그것은 환자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존엄사 합법화를 지지한다.

사실 심폐소생술 거부도 존엄사의 한 예인데, 이는 임종을 집에서 맞고 싶은 고령환자의 경우 대부분 인정돼 왔다. 말기암환자나 전신화상환자 등의 경우 환자 본인과 의사와 가족이 동의한 치료중단(존엄사)도 비밀비재하다.

따라서 사회적 금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줄여 줄 존엄사법 제정은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공격"이라며 존엄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존엄사는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정지한 것 자체가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은 뇌사와 영구적 식물인간 등 '되돌릴 수 없는'

여러가지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권영길 후보의 공약인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뿐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단순히 치료만 중단하면 흔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비관해 자살하는 현실을 볼 때, 이런 환자들이 비교적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난 2000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나 몇몇 나라들에서 안락사가 사망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매거릿 바틴, <의료윤리저널 Journal of Medical Ethics> 2007년 33호).

존엄사 합법화는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무상으로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중단을 강요당하는 비극적 현실 자체가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우매함'과 '악한 본성'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할 뿐이다.

미국의 안락사 합법화 운동의 주요 슬로건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는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운동 진영 전체가 지지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장호중

■ 축약하지 않은 전문을 <맞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동반자 등록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성 커플과 이성 동거 커플 등 지속적인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법적인 '동반자' 지위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권 후보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004년에 사법부는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차별적인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배우자 대소사에 대한 휴가와 수당,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전입신고 같은 간단한 것도 대신할 수 없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죽어도 한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존중돼야 할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같은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권 후보의 '동반자 등록법'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또, 더 나아가 동성 커플에게 입양과 인공수정도 허용하는 동성 결혼의 권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결혼이 해방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동성 결혼처럼 반동적 이유에서 불허되고 있는 경우 결혼의 권리를 마땅히 옹호해야 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성균관 등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한기총은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현재 음성화 돼 있던 동성애자의 권리 주장이 양지로 드러나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역겨운 주장을 한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항의 서한 및

항의 방문 등 입법을 저지할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성균관 교육원장 최병철은 결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족유지를 위한 생식을 위해, 인류의 보존과 영속성을 위해 이성끼리"하는 것이라며 "자연질서와 전통에 반한 행동을 하면서 혜택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하는 모든 남녀가 오로지 생식과 출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동반자

같은 인간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생식·출산과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자연질서에 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부일처 가족제도를 통해 노동계급과 노동력 재생산을 통제하려는 자본주의 질서에만 반할 뿐이다.

이미 1백여 년 전에 독일 사민당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법률에 맞서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러시아 혁명 당시에는 여성과 동성애를 억압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없어지고, 성해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오늘날에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30여 개 국가가 '동반자 관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등 5개 국가와 미국의 2개 주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했다.

남녀간 만의 결혼과 일부일처제 가족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낳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의 주장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혼인유무·가족 관계·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

류민희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30

왜 이주노동자를 방어해야 하는가?

오늘날 이주노동자나 난민 문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정치 의제이다.

그 이유는 주로 두 가지다. 첫째,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와 전쟁의 결합으로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의 물결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물결이었을 것이다. 둘째, 그 물결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 나라의 지배계급들이 이주노동자나 난민 문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고 있다.

이들 지배계급이 이 엄청난 인구 이동에 직간접 책임이 있음에도(빈곤·실업·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들거나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고 이주노동자들을 수입함으로써) 이들은 이주 현상이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널리 퍼뜨리려 애쓴다.

구체적 사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일반적 취지 —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고 수많은 신문·방송 기사를 통해 보완되는 — 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나 똑같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항상 “그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항상 이미 미어터질 것 같은 나라에 마치 침략군처럼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거나 몰려들 태세라는 것이다. 또, “그들”은 항상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서 “우리 나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집도 슬그머니 가로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집이 부족하게 만든다.

“우리”와 “그들”

[또, 지배계급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들의 존재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온갖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말을 모르거나 너무 많은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병에 걸릴 것이고, 그리 되면 그들이 병상을 차지한 채 희귀한 자원을 소모해서 병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들은 또, 외국에서 여러 질병을 들여와 퍼뜨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주노동자나 난민 들은 흔히 절도·마약·매춘·흥기난동 등의 범죄를 비롯한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당국은 여전히 자국민보다 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데 여념이 없는 듯하다.

설사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그들의 “낯선” 문화, 즉 언어(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와 의복과 음식(이 때문에 그들에게



정부와 기업주들은 싼 값의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면서도 이주노동자를 단속·차별·억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강화한다

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과 종교(그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등등 때문이다.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거나 뒤섞여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름지기 사회주의자라면 이런 주장들을 논박하고 이런 주장들이 반동적인 쓰레기임을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이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등장하는 [지배계급의] 과장과 신화, 순전한 거짓말을 논박할 구체적 사실과 통계에 정통해야 한다. 분명히 그런 구체적 사실들은 나라마다 경우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전체 논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이론적 요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는 단순한 진실인데, 인구 증가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들의 존재가 문제라고, 인구 증가는 불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다. 분명히 이것은 모든 나라 정부와 지배계급들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다.(실업자·노숙자·빈곤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진실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다. 정말로 인구 증가 때문에 실업자나 노숙자가 생겨난다면, 실업자나 노숙자는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늘어났을 것이다. 사실, 일자리나 집은 그 수요가 일정하게 한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을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 인구 증가는 근본적으로 생활 수준이 상승한 결과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거나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거나 더 오래 사는 것은 식생활·보건의료·생활 수준의 개선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가 확장되면 노동력 수요도 증가하는데, 이런 노동력 수요 증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나 이주노동자 수입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똑같은 이유로, 실업 증가의 진정한 원인은 경기 침체나 공황이다. 인구 규모나 이주노동자는 실업 증가와 아무 관계도 없다.

인종차별

두번째 일반적 요점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차별 사이의 연관이 다. 이주노동자들을 반대하거나 이주노동자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자신들의 주장과 인종차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둘 사이의 연관]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인종차별주의는 대략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대개 처음에는 노예무역, 나중에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영하고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체계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 인종차별주의는 이른바 “인종”이나 민족성의 신화적 위계 구조를 확립했다. 즉, 유럽의 백인들이 가장 우월하고, 극동 아시아인들이 그 다음이고, 남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장 저열하다는 것이다. 이런 위계 구조에 수많은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덧붙여졌다. 예컨대, 흑인들은 게으르다거나 동양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교활하다는 생각 따위가 그렇다. 유럽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문화적·이데올로기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인종

차별적 위계 구조와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유럽 밖의 사회들에서도 그랬다. 항상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런 편견들(명시적으로 표현하든 안 하든)에 의존하거나 편견들을 이용해서 이주노동자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지배자들의 걸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국의 이윤을 지탱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을 분명히 받아들인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부추긴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손쉽게 속죄양으로 만들고 노동계급을 분열시켜서 얻는 이익 때문이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 취업권이나 노동조합도 없이 초과 착취당하는 값싼 노동력 — 를 계속 유지·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이주노동자나 온갖 종류의 난민들에 대해 지배자들과 정반대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주의 잠재적 혜택 —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혜택 — 을 강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국내외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직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직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뉴코아 · 이랜드 투쟁

12월 6일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홈에버 신도림점 개장식 타격 투쟁을 멋지게 성공시켰다. 11월 29일 홈에버 포항점 개장 영업이 완전히 마비됐듯이 신도림점 개장 영업도 엉망이었다.

이랜드그룹 회장 박성수는 신규 점포 직원을 전부 외주 용역직원으로 채우며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조차 “최근 사태의 책임을 고려할 때 … 또다시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박성수를 비판했을 정도다.

이날 투쟁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참가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다함께’ 등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연대해 온 동지들 5백여 명이 함께했다.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옥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강력히 투쟁하는 게 바로 민주노동당 집권의 길”이라며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해 악질 자본 이랜드를 끝장내자”고 했다.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 연대 파업과 홈에버 포항점 개장식 타격 투쟁이 성공하고, 명동성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농성 돌입 이후 기독교계의 지지도 확산되면서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성탄절을 박성수 타격 투쟁과 함께

마침 전교조의 지지금 납부에 힘입어 민주노총이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밀린 생계비를 지급한 것도 다행이다.

신도림점 투쟁 이후 교섭에서 이랜드 사측은 “핵심 주동자를 제외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며 한발 후퇴했다. 내년 1월 뉴코아 · 이랜드 법인을 통합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인 박성수는 지금 매우 다급한 처지다. 이럴 때 틈을 주지 말고 계속 편치를 날려야 한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성탄절을 즈음 강력한 매장 타격 투쟁을 벌이고 (박성수가 다니는) ‘사랑의 교회’와 한



12월 6일 홈에버 신도림점 개장식 타격 투쟁

국기독교총연합회에 사태 해결도 촉구할 계획이다.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의 승리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계획에 힘을 보태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의 연대가 핵심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각 연맹과 산하 노조에 투쟁 참가 지침을 보내고 실질적 동원에 힘쓰기 바란다.

최영준

고려대 출교 투쟁

이건희는 감옥으로, 출교생은 학교로!

고려대 출교생들은 12월 7일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견희 구속, 명예철학박사학위 반납, 삼성 전략기획실장 이학수의 고려대 재단이사 사퇴, 이견희 반대 시위에 대한 보복성 출교 철회를 요구했다.

이견희 회장 탈을 쓰고 “잘못했습니다. 명예박사학위 반납하고 감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든 퍼포먼스는 시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삼성 해고자 김갑수 동지 등은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견희 반대 투쟁을 함께해 나가는 동지로서 돈독한 애정과 연대를 보여 줬다.

안형우

학생운동의 올바른 대선 실천은 무엇인가?

올해 학생운동은 한미FTA 반대 투쟁, 파병 한국군 철군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등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것 또한 학생운동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반갑게도 2002년 대선에 비해 올해는 학생운동 내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 활동이 더 광범하게 조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한총련, 대학생 ‘다함께’ 등이 주축이 된 대학생선거대책본부(대학생 선대본)는 권영길 후보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학생 선대본 소속 신입 학생회장 당선자 1백2명이 권영길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일보는 지난 대선에서 소위 ‘개혁’ 후보에 대한 은밀한 ‘비판

적 지지’ 입장을 취했던 한총련이 이번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가능했다. 물론 반이명박 · 반이회창 투쟁에서 범여권 후보에 대한 비판을 삼가거나, 권영길 후보 지지를 투표 호소와 분명히 연결시키지 않는 모호함은 아쉽다.

한편 기성 정당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비판해 온 전국학생행진(전)과 같은 단체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간하지 않는” 실천을 한다면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학생운동 활동가들은 주변의 동료 학생들에게 부패 후보도 개혁 사기꾼도 아닌 진보 후보 권영길에게 투표할 것을 적극 호소해야 한다.

정병호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더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다함께’ 동지들께, 이주노조 사무국장 마숨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혀와 걱정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있어 늘 의지가 됩니다.

이주노조를 함께 지켜주시고, 새로운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만드는 것도 도와주세요. 또, 이주 노조 탄압 반대 운동을 조직해 투쟁의 거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회원으로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에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는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구속된 3인을 대표해 마숨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2008년 총학생회 선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올해 서울과 지방의 주요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운동권(좌파)과 비운동권(중도 혹은 우파)은 당선 총학생회 수나 전체 득표수 총계에서 대략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획득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비운동권 당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무현 정부 초기보다 비운동권의 당선이 더 흔한 일이 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개혁 배신과 이에 대한 대안 부재감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실망감 속에 점차 실용적 가치를 좇게 된 결과다. 이에 따라 학생회 선거에서도 ‘비정치성’과 실용주의적 가치를 표방하는 비운동권 선본들이 당선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물론 이런 현상이 학생 의식의 우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최근 대학생 의식에 대한 여러 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진보·중도·보수 성향 비율은 대략 각각 3분의 1씩 차지했다.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총학생회 선본이 학생들의 항의 때문에 이명박 지지를 철회하거나 심지어 이명박 지지 후보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를 했는데도 낙선한 사례는 학생들 사이에 우파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당선된 비운동권 후보들은 대체로 우파적 성향보다 ‘비정치성’을 내세워 중도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닌 학생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가령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한 비운동권 선본은 ‘등록금 인상 결사 반대’와, 비록 양비론이긴 하지만 출교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고 당선했다.

좌파 후보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좌파가 여전히 강력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줬다. 좌파 후보들이 전체 투표의 절반 가량을 득표했는데, 이는 진보 성향 학생의 비율(전체 학생의 3분의 1)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NL 경향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NL 경향 활동가들은 올해 2·13 합의 이후 복미 관계의 일시적 긴장 완화 속에서 자신감 있게 주요 운동 건설에 나섬으로써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물론 이런 긴장 완화가 북한의 선군정치 덕분이라는 틀린 인식에 기반을 둔 자신감이었지만 말이다.)

반면 PD 경향은 약화했다. PD 경향은 대중운동에 대한 종파적 태도 때문에 주요 운동에서 영향력이 축소돼 왔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PD 경향의 대표적 단체인 전국학생행진(건)의 경우, 대학 내에서 중도적 학생들의 여론을 의식해 참예한 쟁점에 대해 종종 회피적 태도를 취한 것 때문에 학생회를 통해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지 못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반노무현 반사 이익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우파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억압과 경쟁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 속에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지난 10년 간 ‘개혁’ 정부 하에서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습득하며 성장한 학생들은 친미·부패·권위주의와 같은 불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

김영삼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이 전두환·노태우 구속 투쟁, 등록금 투쟁과 반우파 투쟁 등을 거대하게 건설해, 결국 신한국당 정권을 총체적 위기로 빠뜨린 노동자 투쟁(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의 방아쇠 구실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저항 잠재력을 이해하고 진취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려 한다면, 차기 정권 하에서도 학생운동은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병호

‘식칼 테러’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한 황칭난

중국 경제 기적의 비결 중국판 ‘식칼 테러’

팀 셰퍼드

11월 20일 오후 서너 시 무렵 노동운동가 황칭난(黃慶南)은 중국 남부의 도시 선전 — 눈부신 경제 성장 중심지 가운데 하나 — 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청년 두 명이 다가왔다. 그 중 한 명은 큰 칼을 들고 있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의사들은 칼에 맞아 중상을 입은 황칭난이 오른쪽 다리를 못쓰게 될 거라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칭난이 운영하는 노동자 권익센터가 있다. 노동자 권익센터는 임금 문제로 사용자와 분쟁중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노동자들은 이곳에 형편대로 돈을 내고 체불임금 지급이나 산재 보상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공장 소유주들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황칭난을 눈엍가시로 여기고 있었다.

중국의 성장하는 민권운동의 일부인 노동권 보장 운동은 흔히 “웨이판(維權)” 운동, 즉 권리를 지키는 운동

이라고 부른다. 11월 13일에는 또 다른 노동운동가가 폭력배들의 공격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폭력으로 점철돼 있고, “경제 기적”의 결과인 중국의 빈부격차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국내 이주민들을 착취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농촌을 떠나 경제 성장의 중심지인 동부 연안 지역의 공장과 건축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에만 도시에 머물 수 있다. ‘임시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농촌 출신 이주민이 경찰에 적발되면 흔히 15일 동안 감금된 뒤 집으로 송환된다. 이런 사정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임금을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항상 수세에 처한다.

황칭난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의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 법의 긍정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법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끄는 다국적기업들의 격렬하고 끈질긴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됐다. 그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폭력배

결국 타협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의 선출되지 않은 의회 — 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법이 느슨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합법적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계 덕분에 노조는 법안 작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지방정부 관리들은 흔히 자본가들과 한통속이고, 경영진이나 경영진의 꼭두각시들이 기업 단위 노조들을 좌지우지하도록 보장한다. 어찌다가 노조 간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발언이라도 했다가는 해고되거나 좌천되기 십상이다. 기존 노조의 틀 밖에서 조직하는 노동자들은 체포와 투옥을 각오해야 한다.

비록 중국에는 파업권도 보장돼 있지 않고 결사의 자유도 금지돼 있지만, 노동자들이 최근의 노동력 부족 상황과 권리 의식 각성을 이용해 최저생활 임금을 제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 투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비록 독립 노조는 금지돼 있지만, 향우회가 때때로 파업 투쟁을 조직한다. 파업 투쟁 과정에서 이런 향우회들이 단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4년 이후 선전 시정부는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두 번이나 인상해야 했다. 또,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몇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공격이 끔찍한 죽음을 낳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흔히 억명의 폭력배들한테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곤 한다.

아직도 병원에 있는 황칭난은 1만 파운드(약 1천9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홍콩의 노동조합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은 연대 기금을 모으고 있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중국 건설 노동자들 — “피땀 흘려 번 돈을 달라”(還我血汗錢)

‘삼성 정권’ 연장이 합을 분쇄하라

바다를 오염시킨 검은 기름같이 이 사회를 휘감아 오염시키고 있는 삼성 비자금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7개에서 수십억 원이 오고간 것을 파악했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밝혀낸 것이 이 정도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아직도 어떻게 하면 수사를 안 해볼까 하고 있다. … 검찰 내부의 [삼성]장학생들이 판을 치는 건지 별별 잔머리를 다 쓰고 있다” 하고 한탄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처럼 삼성이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면 비자금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삼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한 삼성SDI는 부산공장에서만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3천여 명을 ‘소리없이’ 해고했다. 올해에도 비정규직 1천여 명을 해고했고 최근에는 정규직 1천50명까지 구조조정하려 한다.

떡값검찰이 삼성 범죄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이 지배자들과 기성 언론들은 “특검은 경제 살인범”이라며 벌써 특검 흔들기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상렬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이번 삼성 사태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협박했다.

대한변협은 ‘떡값’을 특별히 더 받았을 것 같은 검찰 고위직·대형 로펌 출신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려 용쓰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를 ‘삼성장학생’으로 관리하는 데 자신이 “직접 참여한 일도 있다”고 폭로했다.

변협이 특검 후보로 거론하는 김종빈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검찰 총장으로서 이견희 소환조사에 반대했던 자다. 유창중·이명재·정홍원은 검찰 고위직을 거쳐 삼성과 재벌을 주고객으로 삼는 대형 로펌인 세종·태평양·로고스에 소속돼 있다. 심지어 뇌물 수수 전력, 비리 의혹까지 있는 자들도 있다. 반면 변협은 민변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특검 흔들기

‘웃로비’ 특검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고위급 출신을 특검 후보로 하겠다는 변협의 입장을 뒤집어 생각하면 검찰을 제대로 비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배자들은 삼성의 범죄를 파헤치고 처벌할 특검이 아니라 삼성과 그 장학생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정치부장 김민배는 “특검이 신년 초부터 1997년 이후 삼성 비자금을 다 뒤지고, 2002년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 그리고 삼성 그룹의 내부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며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이 때문인지 노무현과 이명박이 만나 BBK와 삼성 비자금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기로 합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 말많은 노무현이 “[BBK]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전례도 없다”고 하는 것도 미심쩍다.

“서울시장 시절 삼성의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노회찬 의원은) 이명박도 노무현과 동병상련일 것이다.

이제 삼성은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 주며 다음 정권도 자신들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 삼성증권 사장 출신으로 삼성 비자금 관리자였다는 황영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도 이명박 캠프로 들어갔다. ‘삼성 정권’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야합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시작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자 1천여 명이 4시간 연대파업을 하며 삼성SDI 부산공장 앞에 모여 삼성의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하이비트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삼성SDI 정규직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삼성이는 이 집회가 두려워 12월 6~7일에 예정에도 없던 공장 휴무에 들어갔고, 정문 앞에는 2미터 높이의 철문을 세웠다. 삼성SDI에서 노조 건설 움직임은 계속 진척되고 있다.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다함께’·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참가한 12월 8일 삼성타워 앞 집회는 다양한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이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삼성 범죄 공화국의 문제는 이명박 비리와 맞물려 다음 정권 내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성 이견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으로 결집한 진보진영은 삼성에 맞선 대중 운동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

강동훈



삼성SDI 하이비트 여성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금속노조울산지부가 12월 7일 4시간 파업을 벌였다



“권영길 찍어 노동자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자”

이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니)

“권영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내 소원이야.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노동자들이 무조건 다 찍고 일가친척 다 불러 모아서 찍으라고 해야 돼. 우리가 비정규직 없애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은 그 길 하나뿐이지. 꼭 그래줬으면 좋겠어.”

김상진

(한국노총 산하 세종호텔노동조합 위원장)

“많은 후보들이 비정규직을 위하고 일자를 만들겠다고 떠들어 댄다. 그러나 이랜드, 코스콤 등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아픔을 함께한 후보는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권영길 후보뿐이다.”

김명복(삼성SDI 하이비트 노동자)

“솔직히 2002년에 다른 사람을 찍었어요. 될 사람에게 표를 줬던 거죠. 사표가 되는 게 싫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노동자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권영길 후보가 얼마나 표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본가들은 가늠할 거예요.”

김경욱(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우리가 경찰에 에워싸여 폭력에 노출됐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회창이 왔는가? [그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밥 굶어가며 노숙하고 농성했다. 이것이 권영길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 분야야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다. 권영길 후보를 찍는

것이 노동자를 찍는 것이다. 권영길을 찍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우리의 적들을 찍는 것이다.”

